

심사대상 : 작업장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심사위원

성명	서명
장 성 록	
진 상 은	

본 심사의 주된 사항은 개별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기존 안전평가 결과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근거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 결과 : 종합 4등급

구 분	등 급
종합등급 (1,000점)	4
① 안전역량 (300점)	5
② 안전수준 (450점)	4
③ 안전성과 (250점)	5

범 주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등급
안전역량 [300점]	① 안전역량 등급		300	5
	1. 체계 역량	소 계	170	E
		①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40	E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40	E
		③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E
		④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30	E
		⑤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30	E
	2. 관리 역량	소 계	130	D
		①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40	D
		②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30	E
		③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30	D
④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30	E	
안전수준 [450점]	② 안전수준 등급		450	4
	1. 작 업 장	【작업장 안전관리】	450	D
		①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50	C
		②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150	C
		③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90	D
		④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60	D
⑤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100	E		
안전성과 [250점]	③ 안전성과 등급		250	5
	공통	①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50	C
		②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80	D+
		③ 안전문화 확산	20	C
		④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100	E

※ 각 지표별 최종 득점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

※등급 구분표(100점 기준 환산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등급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 미만	
	A		B		C		D		E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급	A+	A	B+	B	C	D+	D	E+	E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0점	

범주	총 평
안전 역량	<p>기관은 전반적으로 안전역량 수준이 매우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기관의 안전보건팀을 안전경영지원단 소속의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과 혼재하여 배치하여 '경영지원단'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 안전경영위원회를 부원장 주관으로 연 1회만 운영하였으며, 서면결의의 방법을 채택한 것과 회의안건-안전예산 편성 안-을 검토해 볼 때 해당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덧붙여, 회의록 등의 확인 결과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 또한 매우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안전관련 법령 및 대내외 안전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상반기(21.05.14) 검토 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p>
안전 수준	<p>【작업장 안전관리】</p> <p>기관의 작업장을 평가한 안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즉, 현재 기관의 안전수준은 문서 위주의 안전 활동으로 판단되며 현장에서 안전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관은 안전인력과 조직, 안전경영시스템을 보강하여 안전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21.11월에 인증되어 21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기간 전반에 관련 지침이 실제로 반영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침에 근거한 점검 실적 등도 미비하였다</p> <p>기관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중 작업표준을 마련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작업에서 컨베이어 및 분쇄기·혼합기취급 작업이 기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작업인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지침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p>

범주	총 평
안전 성과	<p>기관은 안전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편이며, 과년도 지적사항을 대부분 이행으로 평가받았으나 많은 지적사항이 개선조치에 있어 질적인 부족함이 있다. 또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편이며 형식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다. 그 예로, 기관은 '21년도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특별한 변경 없이 '22년도 계획에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매우 불성실한 이행이라고 판단된다. 보고서 중 '안전대책 및 안전지침 추진과제 이행 내역 및 계획'의 추진 일정은 날짜만 수정하여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 점이 확인된다. '이행'으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기관이 자체 검토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추가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Ⅲ 범주별 개선사항

○ 안전역량

개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주관 2.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보다 적극적 홍보 3. 안전부서 근로자 우대 사항의 인사규칙 명기 4.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한 하청업체의 의견 적극적 수렴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6. 안전경영책임계획 주요 안전의 예산 반영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의 요구사항을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세칙에 반영 8. 실행과제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과 모니터링」 절차와 연계한 연간 목표 대비 실적관리 필요 9. 위험성 추정 시 빈도, 강도에 대한 설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절차서와 다른 부분 수정 10.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파악이 누락된 사항의 개선 11.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체계에 심리상담 및 치료기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추가 12. 전년도 교육결과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계획 수립 13.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포함한 재난안전 매뉴얼의 고도화

○ 안전수준

개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상조명설비의 설치 및 비상구 피난유도등 상시 점등 확인 2. 보호구 관리 기준 구체화 3.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에 근거한 점검 및 실적의 관리 4. 부산본부 자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5.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이 제고 6. 작업중지요청 시 불이익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 7.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 실행의 근거 마련 필요

○ 안전성과

개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충실한 작성 2. 과년도 지적사항의 추가적 이행 3. 안전보건 내부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공모전에 협력업체 참여

1 「안전역량」 범주 심사

1. 체계역량

2. 관리역량

1. 체계역량

【1】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핵심가치

최고경영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제반 안전보건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공유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장은 ‘구호로 하는,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전’의 정착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은 안전전담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피력하였으며, 현장에 적용을 위해 스텝조직과 라인조직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장 점검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업무차량 180대의 트렁크 비상등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직원 안전에 집중하고자 노력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준비와 노력의 과정에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믿으며, 법규의 회피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 대국민안전과 관련하여, 기관은 전자과 피해로 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대국민안전에 힘쓰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휴대용 전자과 측정기 무료 렌트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영유아 돌봄시설 등에 대한 전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힘쓰고 있다. 기관장의 구체적 활동상황을 확인해 보면, 안전관련 협의체의 운영은 부기관장과 단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관장이 주관인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장은 20년 3월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21년 6월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안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피력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안전 최우선, 2)근로자 자율안전, 3)위험점 제거 노력, 4)협력사 안전, 5)의사소통 체계 등의 다섯 가지 주요 포인트로 작성되어 필요한 요점이 잘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방침의 수립을 위해 자문회의 및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나, 방침이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면 실용

성 있는 방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주요 회의실에 게시하였다. 다만, 별도의 교육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경영위원회를 부원장 주관으로 연 1회 운영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에서 규정한 반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즉, 반기 1회씩 보고 안건으로 규정된 ‘사업소 안전근로협의회 회의결과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유일한 회의 의결 안건으로 22년 안전예산 편성안을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특징적으로,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서면결의의 방법을 채택한 것과 회의안건을 검토해 볼 때 해당 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기관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회 주관
2. 안전보건경영방침의 보다 적극적 홍보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기관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관리 업무 총괄 권한 부여 등) 구축하고, 안전관리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동기부여 등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등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상시근로자 250인 규모의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 구분표” 제6호의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 1명 선임하였다. 지역별 지방본부는 총 10개소로 최대 20인이 근무하고 있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특히, 안전관리 조직구성을 위해 내·외부 안전관련 현안 파악 및 안전조직의 상황조사 보고서 등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조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임원 중 한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현재 부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한, 부기관장 직속으로 안전센터를 두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를 만족하였다.

○ 기관은 직제규칙의 업무분장을 통해 안전보건팀의 업무를 안전관련 전담조직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지원단 소속의 인사총무팀과 재무회계팀의 업무는 안전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사의 스텝조직은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임명하였으며, 산하기관의 스텝조직에는 지방본부의 본부장이 관리감독자로 임명되었으며, 동일하게 지방본부의 팀장이 안전담당관으로 임명되어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특징적으로, 매월 4-4-4 안전점검의 날(4일, 14일, 24일 안전활동)을 지방본부의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관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도록 하고 본사로 시행결과를 송부토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점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안전관리팀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관련 이슈를 주도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개인보호구 등의 안전관련 물품의 구매와 관리를 진행하였다. 기관의 특성상 공사, 시설변경 등의 이벤트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1년 4월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세칙 제8장 기타의 73조(전문성 강화 등)에 ‘안전부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경력, 전문성, 자격, 성과 등을 근무평점, 성과평가, 가점부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우수한 안전담당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해당내용이 인사규칙 등에 명기된 내용이 아니고 해당 구문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된다.

○ 안전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재난안전 체험관 답사를 2인이 진행하였으며, 외부기관 휴넷에 의뢰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총4회 수료하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팀 2인이 연 3일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만, 안전보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자격취득 지원 등은 부족한 편이다.

○ 기관은 안전근로협의체를 21년 4회 운영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회의록 확인결과 구체적인 안건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목적인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토록 하기 위함’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21년 총 4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였다. 분기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4회의 회의 모두 회의결과는 ‘원안의결’로 구체적 논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형식적 회의 운영이 아닌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또한, 4차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 점과 3/4차 회의는 운영지원단장과 노조부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함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24조를 고려하여 향후 해당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부서 근로자 우대 사항의 인사규칙 명기
2. 안전근로협의체를 통한 하청업체의 의견 적극적 수렴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3】 안전보건경영 투자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21년 7월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시 세부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월별 일정과 소요예산, 담당자를 명기하여 예산을 관리하였다. 21년 약 80%(55억/69억)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안전예산편성 기준표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예산 카테고리별 안건의 적절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예산 운영을 위한 안전예산 운영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PDCA 사이클에 기반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구체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반영과 그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 주요 안건의 예산 반영

【4】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지침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안전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기관의 위험요인 및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하위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및 절차서·지침 등의 관리를 위한 제·개정 절차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심사의견

○ 기관은 '21년 4월 안전보건관리세칙을 제정하여 해당 세칙을 내부 전산망 및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있다. 세칙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며 시설물, 진흥원 발주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물론 진흥원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는 총칙,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안전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평가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세칙의 목적에서 제시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은 '21년 6월 제정하여 '21년 12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통해 마련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1건), 절차서 (16개), 지침서(31개)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만, 안전보건관리세칙 제정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기관의 1/4분기 노사협의회('21.03.29.) 결과 확인할 수 없는 점은 유의하여 위원회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세칙은 '21년 4월 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요구하

는 '건설발주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및 조치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외 기타 요구되는 '휴일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완 요소이다.

○ 또한 안전보건관리세칙 제2조(적용범위) ②항의 '관련법령 및 진흥원의 단체협약·인사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세칙에 따른다'는 내용에서 인사규정 하위 규범인 인사규칙을 안전보건관리세칙의 상위 규범으로 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행 사항을 반영한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여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임직원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체계 등의 내용을 내포한 외부 초청의 안전보건경영 기본교육을 실시한 것은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안전관련 지침서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와 안전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사무실, 통로 등 '사무실내 안전수칙 및 기준', '휴일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작업기준', '미세먼지, 폭염 및 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작업중지 기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기준' 등을 추가 반영하여 규정과 하부 지침이 연결되도록 보완하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안전관련 법령 및 대내외 안전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최신화하여 급변하는 안전보건법률 및 정보 등에 대응하고자 KCA-SHP-5(법규 및 준수평가)에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반기('21.05.14) 검토 후 하반기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안전보건팀에서 관련 법령 정보 수집, 검토, 적용 여부 판단등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절차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선할 점 요약】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의 요구사항을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세칙에 반영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조직·업무 특성, 사고통계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목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21년 안전경영목표를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정책과 우리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과 임직원 모두가 안전한 KCA 구현을 위한 안전경영 전략 개선안 마련'으로 설정하였다. 안전경영책임계획은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수립하여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20.12.30.)한 것은 확인된다.

○ 다만,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주무기관 장에게 제출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나, 전임 담당자의 퇴사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적 제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이후인 '21.09.13.에 이사회 승인을 결친 것은 보완할 요소이다. 또한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경영 체계구축(4과제), 작업장 안전분야(4과제), 시설물 안전분야(4과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4과제)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중 기관의 무선기지국 검사 특성을 반영하여 붕괴, 감전, 벌집 등 안전취약 지점 DB 수집 및 업무 전 안전점검 등 현장 안전수칙 10계명 제작이 실행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 다만, '21년 충청, 서울본부의 CBT상설검정장 구축 및 실기시험장 리뉴얼 실내 건축공사, 강릉사업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3건의 도급 건에 대한 '발주 건설현장 및 시설유지·보수 현장 등의 도급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추진과제로 분류·수립되지 않은 점은 보다 많은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관련, 안전보건팀 주관으로 '21년 9월에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추진 과제 '3-4. 현장업무 안전대응 강화' 일환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수칙 10계명 동영상 제작·공유'에 대한 추진 결과,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A4 크기의 OPS(One Page Sheet)를 제작·공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 향후에는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사항(목적, 목표, 추진 방향, 추진내용(절차), 추진일정, 추진담당부서 등)을 반영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행과제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과 모니터링」 절차와 연계한 연간 목표 대비 실적관리를 통해 이행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상태도 확인하는 등 기관의 지속적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안전경영책임계획 전략 수립과 세부 실행과제 선정 시에는 기관 내 안전 인식도 조사, 안전 소요 예산 파악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실무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목표·전략 수립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실행과제 이행 실태점검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전경영의 전략 수립과 활동에 있어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실행과제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과 모니터링」 절차와 연계한 연간 목표 대비 실적관리 필요

2. 관리역량

【1】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직영·도급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이행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위험성평가 지침 및 계획에 있어서 기관은 안전보건관리세칙 67조에 ‘위험성평가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21년 11월에 취득하여,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제정 및 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스템에 따른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KCA-SHP-03)’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범위 및 목적, 실시시기, 평가 방법, 조직 구성,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이행점검은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안전보건 위험성평가(KCA-SHP-03) 8.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관은 21년도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21.03.08)하여 전 사업장(빛마루 방송지원단, 지방본부 10개소)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 안전전문기관과 위험성평가 협업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된다. 다만, 본사와 각 지방본부의 경우 서로 다른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체의 참여로 평가 기법이 서로 상이하고 위험성 추정 시 빈도, 강도에 대한 설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절차서와 다른 부분이 확인되므로 기관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위험성평가의 추진은 본사의 위험성평가 평가반(센터장 및 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21년 3월에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검토,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역할 부여에 대해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본사 및 각 지방본부에 대해 7월~11월에 걸쳐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고 작업장 순회점검에

활용하였다. 또한, 본사 관리감독자, 안전담당관, 안전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 '21년 위험성평가를 실시계획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KRAS 기법에 따라 가능성 5, 중대성 4로 추정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위험성평가 컨설팅 업체의 참여로 위험성 추정 시 빈도, 강도에 대한 설정이 가능성 3, 중대성 3으로 실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한편, 본부 지하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충전부 방호조치가 미 실시 되어 있으며, 기계실의 금속절단기 보유, 고소작업대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부식방지제 사용 등에 따른 보호구 미비치(내화학성보호의 등) 및 보호구 구매·비치 시 인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비상발전기 축전지, 냉동기 냉매, 그리스 등) 파악이 누락된 사항이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 수급업체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수급업체의 역량 부족으로 기관에서 총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급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의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공사 및 놀이기구 설치 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수시평가의 누락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상주 수급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어린이집), 광주푸드시스템(구내식당), 전산관련 3개사에 대해 위험성평가가 실시규정에 따라 직접 수행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원이 필요하다.

○ 기관에서 실시한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는 그룹웨어 게시판, 엘리베이터 및 사옥 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공사 전체 및 수급업체에 대해 공지하고 있으나, 향후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및 수급업체에 대해서는 공람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위험성 추정 시 빈도, 강도에 대한 설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절차서와 다른 부분 수정
2.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파악이 누락된 사항의 개선

【2】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체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과 더불어 자율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COVID-19 포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보건경영 지침서(KCA-SHG-17)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포함한 규정을 21년 6월 30일에 제정하였다. 2021년도 선택적 복지제도(건강진단 포함) 시행 알림 문서를 통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21.6.29.'본원 야간 특수건강진단 시행'문서를 작성하여 야간근로자(4명)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건강진단 미수검 근로자에 대해 2회('21.9.8, '21.11.5)에 걸쳐 메일로 수검을 독려하고 이상소견자 중 희망직원 27명에 대해서 주기적인 건강측정, 상담, 건강진단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 다만, 기관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선택적 복지제도(건강진단 포함) 시행의 경우 기관의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KCA-SHG-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여 각 건강진단 대상이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기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타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강 이상소견자 발생현황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지침서 건강검진실시(KCA-SHG-17)에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상담,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선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기관의 'KCA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현행화'에는 대응조직, 전담부서,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전면화 시행, 사업장 내 확진·의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요령에 의거 검사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 체온계, 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각 부서에 배부하였고 출입구, 엘리베이터, 식당 등 밀집지역에 구비하였다.

○ 기관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KCA-SHG-22)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에 대한 목적, 고객응대 업무를 관리해야 할 근거, 적용범위, 문제유발 고객의 유형 분류를 정하여 상황별 응대 매크로를 명시하는 등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다만,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지침서(KCA-SHG-22)와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도 대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시 사업주, 근로자, 외부전문가의 자문, 타 사업장 벤치마킹, 기관에서 발생한 사례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매뉴얼의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체계에 심리상담 및 치료기회 제공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내용, 지원체계, 도움 요청 기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기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과 관련하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KCA-SHG-20)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비대면 건강증진 콘텐츠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건강증진센터 운영매뉴얼의 작성 및 임직원 금연클리닉, 건강클리닉,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지원 프로그램, 코로나 극복 직원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다만, 건강증진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각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이나 그 계획서에 사업주의 의사표명, 목표, 예산, 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진상황에 대한 재검토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증진활동 성과평가인 개인별 건강상태를 체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할 점 요약】

1.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체계에 심리상담 및 치료기회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추가

【3】 안전보건교육·안전인식·활동참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 및 실천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2021년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별첨에 교육 종류, 교육 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작성하였다. 근로자에 대해 온라인교육(산업안전보건공단)을 활용한 위험기계설비 끼임사고 예방교육, 질식재해 위험현장 교육, 건설현장 화재 폭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영책임자와 경영진 2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혁신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외부강사(코샤엠에스 대표이사)를 활용하여 본사 관리감독자, 안전담당관, 안전담당자, 안전센터 직원 등 8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 및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지침서 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다만, 기관 인사노무팀에서 법정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교육 대상 인원, 교육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기·횟수·시간, 교육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을 수립 시에는 상기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전년도 교육결과 및 성과 등의 분석하며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또한, 기관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및 참석유무에 대한 현황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관리하지 않아 교육 미참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상, 하반기로 관리하고 있으나 분기별 교육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근로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기별 시간에 맞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또한 확인할 수 없다.

○ 관리자 및 근로자에 대한 면담결과, 기관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1년 6월 발표한 안전보건방침,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공모전, SNS를 통한 안전메시지 발송 등 안전보건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전반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사적 노력으로 인증 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은 안전에 대한 인식과 체계 변화를 이끌었고 시스템 운영과 이행 노력을 통해 기관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VDT 증후군,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요가 클래스, 일과중 지역 문화 탐방, 재래 시장 방문 등 팀원 동반 힐링캠프 등 건강증진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해당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인지와 개선 대책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사다리 2인 1조 작업, 코로나 감염병 대응 수칙, 중대재해처벌법, 아이파크 붕괴 등 이슈사고 등 그 간 실시한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및 밴드 비대면 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양호하고 동료 직원의 심장 정지나 뇌혈관 계질환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 충격기(AED)를 사용한 응급처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한 공유·인식 수준이 다소 미흡한 점은 해당 내용 교육과 설명을 통하여 인식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

○ 신고제도와 관련하여‘KCA 안전보건관리세칙 제72조(안전문화조성)’에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KCA 안전보건 내부 제안제도 시행을 통해 KCA 임직원 및 위탁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제안(KCA: 16건, 수급업체: 0건) 및 아차사고를 접수(KCA: 25건, 수급업체: 0건)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 그룹웨어 팝업창 게시 및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나, 수급업체의 접수가 없으므로 어린이집, 식당 등 수급업체를 포함한 참여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전파체험관 등 대국민 이용 시설에서 신고,제안 제도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한편, 안전에 관한 신규사업계획 제안 채택 시 인사평가 우대를 실시하고 익명의 톡톡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하여 안전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활동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확인된다. 21년KCA 안전제안 공모전 결과의 후속 조치로 포상을 실시하였으나 포상 사례 중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및 조치 확인이 요구된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은 신고·제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고·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

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제도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전년도 교육결과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 수립

【4】 재해조사 및 비상상황 대비·대응 능력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매뉴얼·절차서 또는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비상시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절차서(KCA-SHP-11)에 위험성평가표, 과거 사건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기록과 재난안전의 사건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해 조사·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 사고 및 비상사태를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화재, 감염병, 태풍·집중호우, 대설, 위험시설 안전, 미세먼지 등의 비상사태 시나리오 등의 재난안전 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이는 각 시나리오별 조직 및 임무, 내부 및 외부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또한, '21.6.23. KCA안전의 날을 119안전센터와 협업을 통해 소방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21.11.4.~5. 2021년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 훈련 교육 결과에 사고 시나리오, 참석 인원,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외부교수의 확인을 받았다.

○ 기관의 비상시 대비대응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소화기 및 소방설비는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소화기관리(KCA-SHG-13) 등에 대상을 지정하였으며 정기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매월 1회 점검하고 배터리는 5년, 전극패드는 3년 주기로 교체하고 비상발전기의 경우 발전기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 또한 2021년 정기점검 계획표를 수립하였고 매주 1회 무부하 운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다만,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포함한 재난안전 매뉴얼의 시나리오에 주요 발생 가능 대상과 그 유형 및 형태 사고발생 시 초래할 결과 등에 대한 예측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비상시 대피절차 시 대피경로와 대피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기관의 안전보건경영매뉴얼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에서 규정하는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비상·대비 시설,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관이 작성한 발전기 매뉴얼에는 고장 등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고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된

매뉴얼에는 관리자 지정과 자동심장충격기, 구급용구를 활용한 대응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기관은 재해조사 등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 지침서(KCA-SHG-26)에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침에는 조사방법, 조사팀 구성, 노동부·경영진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절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조사의 시기, 해당재해가 재발 사고 여부, 재발사고인 경우 기존 개선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방안 등에 대한 내용과 조사팀 구성에 재해 현장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개선할 점 요약】

1.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포함한 재난안전 매뉴얼의 고도화

2 「안전수준」 범주 심사

1. 작업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작업장 안전관리

【1】 작업장 기본 안전보건관리 수준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근로자 및 이용국민이 공사현장, 사무실, 작업장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출입문 및 비상구 유지·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작업장 통로 및 정리정돈 등의 유지·관리에 있어 기관의 부산본부는 작업장 이동통로, 적정 조도의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 상태 등 기본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보관소 등 일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각종 적재장소 및 보관장소에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었고 통로에 불필요한 물품이 방치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발전기실 등에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과 기계실 등 일부 장소에 비상구 피난유도등(2선식)이 미작동된 상태이므로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화학물질 경고표지와 관련하여, 비상발전기실 및 E/V실 등에 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었고 위험물보관소 내 보관하는 청소세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게시하고 있다. 다만, 취급 근로자들의 주의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보관소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 경고표지, 기계실 내 끼임 경고표지, 비상발전기실 내 화기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눈에 띄는 곳에 추가 부착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기실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MSDS를 게시하고 사용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대장 관리와 관련하여,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에 작업종류에 따른 지급대상 보호구, 지급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지침에 따라 부산

본부 검사팀, 진주사업소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안전그네)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하 기계실 입구에는 안전보호구함을 비치하여 방독마스크, 절연장화 등을 보관하는 등 보호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침에 개인보호구별 교체 주기, 지급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보호구 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비상조명설비의 설치 및 비상구 피난유도등 상시 점등 확인
2. 보호구 관리 기준 구체화

【2】 기계·전기 설비 위험방지 및 추락예방 조치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기)기계·기구·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 위험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객의 추락 방지와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에 있어 기관은,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지침(KCA-SHG-08)’에 따라 각 기계·기구·설비별 방호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전검사 실시 지침(KCA-SHG-11)’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산본부 E/V실 설비 회전부 덮개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감전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실 입구에 전기안전 수칙을 부착하였고 시건 및 출입금지구역 구획 등 조치·관리 상태는 양호하다. 다만, 부산본부 기계실 입구에 부착된 현황표 외에 기계실, 전기실, E/V실 등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제조연월, 주요사양, 안전검사대상 여부 및 검사주기 등에 대한 목록 및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기관에서 실제 실시한 점검표(오수처리설비, 물탱크 청소 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점검항목의 대부분을 ‘해당없음’으로 체크하여 자체점검에 대한 실효성과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점검에 대해 점검자 자격, 점검 주기 및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점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KCA-SHG-04)’에 기계·설비 등의 수리, 정비, 청소, 점검 작업 시 LOTO(잠금조치, 표시부착)조치에 대해 명시하였고 E/V실 내 LOTO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였으나, 기계실, 전기실, E/V실 등에 LOTO 장비(표지포함)를 구비하여 실제 기관에서 수리, 정비, 청소, 점검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에 있어 기관 부산본부는 옥상 기지국 앞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였고 사옥 옥상, 청사 내 통로 및 정화조실 입구 등에 계단 안전난간의 상태는 양호하다. 또한, 매월 4·4·4 안전점검의 날에

청사, 시설물, 검사업무용 차량 등을 자체 점검하였고 그 결과 배수관 동파방지 보완, 옥상 노후 물탱크 교체 및 사옥 외벽 누수부위 보수 등을 실시하였다.

○ 다만, ‘작업장 안전조치(KCA-SHG-04)’에 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성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등의 점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지침에 근거한 점검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에 근거한 점검 및 실적의 관리

【3】 화재 및 화학물질사고 예방활동 수준

핵심가치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화재·누출 사고 예방과 근로자 중독·질식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21년 부산본부는 자체 소방계획서를 수립하였다. 소방시설은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관리 및 법적 점검상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기계실 및 지하층 비상구에 설치된 피난유도등이 정상상태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등에는 추가로 축전지 타입의 비상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조금 더 안전하게 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 보관과 관련하여, 부산본부는 1층에 별도의 위험물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세정제, 락스 및 페인트 등을 보관하고 각 물질별 MSDS도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부산본부의 밀폐공간 보유현황 목록은 작성되었으나, 별도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산본부 자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주기 등 파악 및 장소에 대한 위치도 표기, 보유장비현황,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의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21년 7월 기 발행된 밀폐공간 작업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확인결과, 향후 허가서 서식에 가스농도 측정자 자격(직위)을 포함한 서식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개선할 점 요약】

1. 부산본부 자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핵심가치

기관은 고위험 작업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허가제도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에 있어 기관은 안전작업허가제도(KCA-SHG-27))에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은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작업허가는 공사별 신청 및 현장관리주체, 허가주체와 주체별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중 고위험작업 및 떨어짐, 무너짐 방지조치 지침(표준)을 마련하고 해당 작업시 현장에 작업표준 및 지침을 게시하여 공사관계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주요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 중 작업표준을 마련하지 않은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작업에서 컨베이어 및 분쇄기·혼합기취급 작업이 기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작업인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지침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안전작업허가서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기관은 올 해 안전작업허가서 6건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물올림탱크 배관교체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당업무자와 공사 시행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 다만, 기관에서 사용하는 안전작업허가서는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정한 서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작업허가서는 해당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업 시행 주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작업허가 절차와 대상 작업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은 작업중지 요청제를 안전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작업중지요청제 지침(KCA-SHG-29)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작업중지요청은 공사와 도·수급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위험상황 발생 시 안전담당자에게 작업중지 요청, 현장 확인 및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순의 절차와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중지 요청 실적을 기록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 다만, 작업자가 작업중지요청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참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은 현재 작업중지요청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침에 따라 안전 교육시 제도 안내 및 작업장 내 관련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기관은 무선국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선국검사 안전매뉴얼(2019년 8월)을 작성하고 있다. 무선국검사 안전매뉴얼에는 검사관이 차량, 선박, 철탑, 산악리프트 및 사다리 등을 이용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관은 사고 위험이 높은 무선국 검사를 수행할 때 직원들의 안전작업수칙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정기안전교육에 직원을 대상으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수칙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다만, 안전매뉴얼에서 산악리프트, 사다리 등의 검사 기계 및 보조 설비의 안전조치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직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무선국 검사업무 수행 시 발생된 다년간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아차사고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안전매뉴얼을 보강하여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점 요약】

1. 고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표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이 제고
2. 작업중지요청 시 불이익 금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

【5】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도급사업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업체(관계수급업체 포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지침 수립에서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상의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제정(21.06)하고 ‘적격수급업체 선정(KCA-SHG-24)’,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KCA-SHG-25)’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통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21. 11월에 인증되어 21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기간 전반에 관련 지침이 실제로 반영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전부서(전문가 등)가 위험성 및 안전대책을 사전 검토·기록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른 특수 작업이나 중대 위험성이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관련 외부 전문가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절차 이행·환류 수준에 있어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적격수급업체 선정(KCA-SHG-24)’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수준평가 반영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 다만, ‘21년 기관의 도급작업 계약 현황은 본사 재무회계팀에서 파악·관리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등 수급업체의 전반적인 안전역량과 안전실적 등을 포함)을 구체화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 실행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도급사업의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보면, 기관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와 안전작업허가제도 지침을 준용하고 안전작업허가대상 작업은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취급작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작업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 시행부서가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현장 확인하고 서명하고 있으나, 안전작업허가 지침에서 정한 서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작업허가서 승인 시 작업계획서 내용(고소작업대, 굴삭기, 중량물 취급작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사 시행담당자는 해당 작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작업 시행주체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대상 작업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준과 관련해서 기관은 본사에서 상주 수급업체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개최토록 안전보건경영지침서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KCA-SHG-25)’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 수급업체(KCA어린이집, 구내식당, (주)비온시이노베이터, (주)시스템게이트, (주)웨이브피아)와 협의체 회의를 수행하고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장 순회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주기에 미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식적으로 수급업체에 사전 통지 하는 등 문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발견되므로 어린이집, 식당, 전산실 등 해당 시설 및 설비, 작업 특성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하고 점검자 대상으로 안전기준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에 있어서, 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KCA-SHG-25)’지침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 기관은 교육장소로 본사 건물 복지동 2층 회의실을 사용토록 하고 건강증진교육용 콘텐츠(역류성 식도염 예방 콘텐츠) 및 조리실 안전사고 예방포스터 등을

수급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 KCA 안전의 날에 수급업체(어린이집, 전산 3개 업체)가 참석하여 소방안전, 응급처치, 대피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어린이집)에서는 비대면 안전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식당 수급업체(광주푸드시스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단기·간헐작업 수급업체에 대한 교육은 확인되지 않은 바 관계수급업체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에 있어서는, 본사에 상주 수급업체 직원들을 위한 전용 휴게실, 회복실, 샤워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및 수면시설을 구비하여 기관의 직원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다.

○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지침서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KCA-SHG-25)’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정보를 제공한 실적이 확인된다. 다만, 모든 수급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안전보건정보 제공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작업허가서 승인을 통해 해당 작업 안전보건조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작업사항(어린이집 옥외놀이터 개선사업 등)이 발견되었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 실행의 근거 마련 필요

3 「안전성과」 범주 심사

【1】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개선 조치사항 이력관리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완료 여부와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개선과제 이행 심사>

○ 기관은 총 34건의 개선권고 과제 중 33건(97.06%)의 과제이행이 확인되었다.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1건의 과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이행노력>

○ 이행으로 평가된 33개 과제 또한 완벽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차년도 과제에 면밀히 반영하여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기관은 과년도 평가에서 도출된 이행과제 중 다음의 안전에 있어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다. 기관은 KOSHA-MS 인증을 획득('21.11)하였으나 현장 작동성은 면밀히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험성평가 절차서의 경우 현장 활용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무작업, 현장 업무 무선국 검사, 사옥관리, 공무, 온수보일러 등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확인 되었다.

○ 기관은 안전보건방침의 화상교육, 사무실, 회의실 등 게시가 확인되었으며, 협력업체 밀폐공간작업 시 사전안전교육, 도급자 및 수급자 합동 산소농도 측정 실적도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에 기반하여 개선과제 이행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안전경영책임보고서)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내용, 재해현황 및 다음 연도 주요 계획 등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주요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이행과 발전을 통해 안전경영책임을 정착시켜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전관리의 의무에 집중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 기관의 현장검증을 위해 방문한 부산본부는 무선국 검사, 국가기술 자격검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22년 현재 19명이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해 기관의 외부 작업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작업 중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비스 중점기관으로 작업의 특성상 위험점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정해진 작업장이 없는 옥외작업과 비정형작업이 대부분인 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경영시스템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기관은 21년도 수립한 내용을 대부분 변경 없이 22년도 계획에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매우 불성실한 이행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안전대책 및 안전 지침 추진과제 이행 내역 및 계획’의 추진일정은 날짜만 수정하여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 점이 확인된다.

○ 덧붙여, 기관이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21년 성과로 ‘ICT 신기술 기반 국민안전 서비스’를 제시하고, ’22년 추진과제로 ‘ICT 활용 국민 안전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내용 또한 대동소이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관은 해당 과제들의 고도화를 과제로 목적으로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새롭게 작성하여 구체적인 차별화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활동 추진 활동·실적의 적정성>

○ 기관은 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을 위해 대내외 안전경영여건과 정부정책을 검토하고 기관 안전활동의 SWOT 분석 등을 통하여 단기와 중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전략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해당 내용에 기반하여 추진전략과 실행과제를 도출한 부분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안전전담조직을 구성을 위해 기관의 직제규칙에 안전보건팀의 업무를 안전 관련 업무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함께 편제된 안전경영지원단 소속의 인사총무팀과 재무회계팀의 업무는 안전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기관은 안전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팀을 안전경영지원단에 배치하여 ‘안전관리조직의 최고경영진 직속 조직으로 배치’하여 얻을 수 있는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된다.

○ 본사의 스텝조직은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임명하였으며, 산하기관의 스텝조직에는 지방본부의 본부장이 관리감독자로 임명되었으며, 동일하게 지방본부의 팀장이 안전담당관으로 임명되어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기관은 안전근로협의체를 '21년 총 4회 운영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시에 진행하였다. 회의록 확인결과 구체적인 안전의 기록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목적인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달토록 하기 위함’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21년 총 4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였다. 분기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4회의 회의 모두 회의결과는 ‘원안의결’로 구체적 논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형식적 회의 운영이 아닌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기관은 4차에 걸친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 점과 3/4차 회의는 운영지원단장과 노조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

자위원회가 되어야 함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24조를 고려하여 향후 해당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나, 전임 담당자의 퇴사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적 제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이후인 '21.09.13.에 이사회 승인을 걸친 것은 보완할 요소이다. 또한,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21년 약 80%(55억/69억)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예산 카테고리별 안전의 적절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예산 운영을 위한 안전예산 운영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PDCA 사이클에 기반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구체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반영과 그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관련, 안전보건팀 주관으로 '21년 9월에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추진 과제 '3-4. 현장업무 안전대응 강화' 일환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해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수칙 10계명 동영상 제작·공유'에 대한 추진 결과,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A4 크기의 OPS(One Page Sheet)를 제작·공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 작성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사항(목적, 목표, 추진방향, 추진내용(절차), 추진일정, 추진담당부서 등)을 반영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 아울러, 안전경영책임계획 전략 수립과 세부 실행과제 선정 시에는 기관 내 안전 인식도 조사, 안전 소요 예산 파악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실무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목표·전략 수립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대한 실행과제 이행 실태점검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전경영의 전략 수립과 활동에 있어 보다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원의 안전활동 성과측정>

○ 기관장은 안전관련 협의체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부기관장과 단장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기관장이 주관인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근로협의체 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안전보건방침의 수립을 위해 자문회의 및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나, 방침이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된다면 실용성 있는 방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주요 회의실에 게시하였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21년 안전경영 실적평가는 분야별 추진활동의 미흡한 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어떤 결과로 도출되었는지 정리하였으며, 작업장의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어떤 PDCA 사이클을 거쳤는지 정리한 점은 우수한 점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1년 안전경영책임계획 평가 후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22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으로 연계되어 반영되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을 위해 안전전략 체계도를 수립하고 4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내외부 평가 및 환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기관의 '22년도 추진과제는 '안전 전담조직 전문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추진', '위험성 평가 신뢰성 제고', '안전보건운영 위원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확인되며 해당 내용들이 '21년도 평가에서 이행되었음을 금년도 '개선사항 이행결과 점검표'에 제시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의 무엇이 새롭게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문화 고도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더욱 구체화 되어 도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추진과제의 구체적 내용 기술과 추진 일정의 수립은 우수하며, 달성 여부의 점검을 위한 평가 방법을 정리하였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 기관은 '21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이외의 다른 외부평가기관의 안전수준평가를 받지 않았다. 평가결과는 D등급이었으며, 대부분의 세부평가 지표가 최하위에 해당하였다.

<대국민 안전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 기관은 대국민 안전의 실현을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와 관련 있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전파정보 추적·단속으로 대국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보이스피싱 활용 전화번호 60개, 불법중계기 운영장소 3개소, 5대를 단속에서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기관은 ICT 신기술 기반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생활 중심 전자파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파 취약시설(영유아 시설, 양로원 등), 다중이용 시설(공항, 지하철역 등), 주거·사무공간 등 국민생활 전반으로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확대하였다.

<기타사항>

○ 기관의 대부분의 작업장은 일반 건물의 옥상이며, 해당 작업장에서 기기를 이용한 전파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고소작업이 될 여지가 있는 작업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난간 근처 작업시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항상 변하는 작업장의 유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전체 작업자에게 배포하여 교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관은 안전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편이며, 과년도 지적사항을 대부분 이행으로 평가받았으나 많은 지적사항이 개선조치에 있어 질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편이며 형식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많다는 판단을 하였다.

기관은 금년도 평가에서는 '이행'으로 결론(현재 진행 중 과제는 이행으로 평가)이었으나, 향후 기관이 자체 검토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추가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경영책임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D+"로 평가한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충실한 작성
2. 과년도 지적사항의 추가적 이행

【3】 안전문화 확산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가치가 기관의 안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외부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 기관은 안전문화 정착과 현장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매월 4일은 시설물 점검의 날, 14일은 차량점검의 날, 24일은 현장점검의 날 행사를 빗마루 방송지원단 및 지역본부 10개소에서 실시하였다. 시설물, 차량, 현장점검별 체크리스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서(점검일, 주요내용, 증빙사진, 점검자, 부서장, 점검결과, 개선조치내역 등)로 기록·관리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최고경영자는 지역본부, 검사 현장 등 8개소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경영진 중심으로 Top-Down 방식의 전사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관 및 협력업체 5개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내부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공모전」을 계획·추진한 결과, 16건의 제안제도와 25건의 아차사고가 응모되었으나 협력업체 참여 실적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활동은 유튜브(캠페인, 인터뷰), 유인물, 누리집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전자과 등 '전과' 안전문화 확산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에도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경영진 중심 Top-Down 방식의 전사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및 기관 홈페이지, SNS 활용 등 대·내외 활동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또한 안전문화는 안전의식을 지닌 구성원이 모여 안전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진단하고 환류과제를 도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을 권유해본다.

【개선할 점 요약】

1. 안전보건 내부 제안제도 및 아차사고 공모전에 협력업체 참여

【4】 사고사망 감소 성과 및 노력도

핵심가치

공공기관은 안전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과 관련된 직영·수급 업체·건설발주현장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사고사망 예방 등 안전성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

<사고사망 감소 성과>

○ 기관은 2021년 산업재해통계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

○ 해당 없음